

## 「일·생활 균형 위원회」 현장관계자 간담회 개최



▲ 「일·생활 균형 위원회」 제1차 현장관계자 간담회가 11월 15일 오후 경사노위 대회의실에서 개최됐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산하 「일·생활 균형 위원회」는 11월 15일 경사노위 대회의실에서 제1차 현장관계자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저출생 극복을 위해 일하는 방식 개선과 일·육아 양립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공감 아래 중소기업 담당자와 현장 근로자 등을 차례로 만나 현장의 생생한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 1부에서는 중소기업 담당자들이 참여하여 일·육아 양립 활용에 따른 중소기업 대체인력 확보의 어려움과 개선 방안을 중심으로 논의했다. 2부에서는 현장근로자들이 참여하여 실제 현장에서 겪고 있는 어려움에 대해 토로하는 등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 (1부) 중소기업 담당자들의 현장의견

중소기업 인사담당자인 (주)모코코(정보통신업체) 이정미 차장은 “대체인력 구인이 쉽지 않아 부서원들이 업무를 나누어서 하다 보니 불만이 많은 상황”이라며, “대체인력 확보를 위해 경력 있는 고령자들을 대체인력에 활용하는 방안 등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제조업체인 (주)하나기술 이상운 책임매니저는 “일반 구직자들은 ‘대체인력’이라는 단어를 어려워 한다”며, “전문인력 대체고용 지원사업” 또는 ‘동일직무 고용 지원사업’과 같은 용어로 변경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제안했다. 또 “중소기업



▲ 이인재 인천대 경제학과 교수(일·생활 균형위원회 위원장)가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도 기업 규모별로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규모에 따라 제도의 요건을 완화하고 지원 범위 등을 조정하는 세밀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중소기업 인사담당자) 기업 규모별로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규모에 따라 제도의 요건을 완화하고 지원 범위 등을 조정하는 세밀한 정책이 필요하다

”

대체인력 인재채움뱅크인 (주)제니엘 윤선희 차장은 “중소기업은 대체인력에 대한 눈높이가 높아 구직자 매칭이 쉽지 않고, ‘대체인력’이라는 용어에 대한 부정적 인식으로 구직자도 적극적이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또 윤 차장은 대체인력자의 중도 이탈을 방지하기 위해 대체인력 입사자가 만기퇴사할 때 취업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방안을 제안하기도 했다.

이어 (주)커리어넷 김민서 PM은 “취업에 적극적인 중장년층을 대체인력으로 채용하는 기업에게 세제 혜택을 주는 방안이 검토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2부) 현장 근로자들의 현장의견**

현장근로자인 엄선영 인하대병원 간호사는 “휴직 후 복직하면 근무형태가 달라지거나 근무지 등이 보장되지 못해 복귀에 어려움이 있다”며, “복직 후 불이익이 없도록 인사평가 규정 등의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항공 보안요원인 이상훈씨는 “대체인력 부족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동료들에



▲ (왼쪽) 항공 보안요원으로 근무 중인 현장근로자와 대학병원 간호사로 근무 중인 현장근로자가 간담회에 참석하여 발언하고 있다.

게 업무 부담이 발생하여 원망을 듣는 상황”이라며, “이 때문에 휴직 후 복귀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또 “육아휴직에 따른 경제적 부담이 크다”며, “육아휴직 급여를 상향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

(현장근로자) 복직 후 불이익이 없도록 인사평가 규정 등의 마련이 필요하다

”

중소기업 제조업체에 근무 중이며 두 아이의 아버지인 근로자 A씨는 “소속기업에서 육아휴직 및 1시간 단축근로를 활용할 수 있지만, 급여보전에 대한 걱정과 함께 사내 눈치가 많이 보이는 것이 사실”이라며, “급여보존을 위해 육아휴직 급여를 상향 조정하고 어린이집 및 유치원의 연장 보육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일·육아 양립을 위해 상담 및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서울시 서남권직장맘지원센터 김문정 센터장은 “근로기준법 제 74조에 출산휴가를 이유로 한 해고나 그 밖에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안된다는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수원시 여성노동자복지센터 오유진 센터장은 “퇴직금을 육아휴직 사용과 교환하는 불법적인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며, “눈치 보지 않고 일·육아 양립을 할 수 있도록 ‘자동육아 휴직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권기섭 경사노위 위원장은 “저출생 극복을 위해서는 육아 근로자가 주도적으로 근로시간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어야 하고 사용자도 생산성 저하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대체인력 활용의 애로해소’와 ‘일하는 방식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권 위원장은 “경사노위는 현장 노사의 생

생한 의견을 지속적으로 적극 수렴하여, 근로시간 관련 대화가 일하는 국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

(권기섭 위원장) 대체인력 활용과 일하는 방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

한편 「일·생활 균형 위원회」는 지난 6월 20일, 장시간 근로를 해소하면서 기업 생산성, 근로자 삶의 질을 함께 높이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구성되었으며 지속적으로 현장 의견을 청취해 나갈 예정이다. **eslc**

담당 전문위원실 송해순 전문위원

# “지방소멸 막으려면 지역발전 위한 사회적 대화 절실”

## 경사노위 「중앙-지역 사회적 대화 연계 토론회」 개최



▲ 권기섭 경사노위 위원장(왼쪽에서 다섯 번째)이 11월 21일 오후 서울 중구 경사노위 대회의실에서 열린 '2024년 중앙-지역 사회적 대화 연계 토론회'에서 참석자들과 함께 기념촬영을 했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경영자총협회, 고용노동부, 국회 김위상 의원실, 전국지역노사민정 협의체와 공동으로 11월 21일 경사노위 대회의실에서 「'24년 중앙-지역 사회적 대화 연계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최근 지방소멸이 가속화됨에 따라 나타난 중앙-지역 간 다양한 격차를 해소하고 지역 차원의 사회적 대화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또한, 지역 사회적 대화 활성화를 위한 중앙-광역-기초 노사정 및 지



▲ 권기섭 경사노위 위원장이 토론회에서 축사하고 있다.

역 주체의 역할 규명과 의제 연계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이호근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지방소멸 대응으로써 지역 노사민정 역할과 지역노사민정협의회의 개편 방안'을 주제로 한 발제에서 "지방소멸의 주요원인은 저출생에 따른 인구감소가 아닌, 지역을 떠나는 인구유출"이라며, "지역발전을 위한 지역 주체간 상시적이고 지속적인 사회적 대화 체제 구축이 중요한 국가적 전략 목표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

(이호근 교수) 지역발전을 위한 지역 주체간 상시적이고 지속적인 사회적 대화 체제 구축이 중요한 국가적 전략 목표가 돼야 한다

”

또 이 교수는 “부족한 예산과 인력 등 현재 지역 사회적 대화의 빈약한 인프라로는 지역발전을 위한 거시적 청사진 마련은 물론 지역 수준의 미시적 고용·노동 현안조차도 제대로 다룰 수 없는 형편”이라며, “지방소멸 위험에 체계적·조직적 대응을 위해 가칭 「지역 사회적 대화의 활성화와 지원을 위한 법률」 제정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김주일 한국기술교육대 산업경영학부 교수는 '중앙-지방 협력과 지역 사회적 대화 활성화'를 주제로 한 발제에서 “지역 사회적 대화의 역할을 '지역의 의견을 수렴하고 실천을 담보하는 공론장', 일자리나 노동 전환 등의 '지역 현안에 대한 주제적 합의', '중앙정부 정책이나 일자리 사업의 전달체계'로 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

(김주일 교수) 위원회와 노사정 주체 모두 참여하는 중앙과 지방을 잇는 조직 신설이 필요하다

”

또 김 교수는 이를 위해 “위원회와 노사정 주체 모두 참여한 가운데 중앙과 지방을 잇는 조직이 신설될 필요가 있고, 경사노위에도 지역현안 이슈를 전체적으로 공유하고 지원 체계를 논의할 '지역 사회적 대화 위원회'(가칭)를 설치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김 교수는 지역의 사회적 대화 인프라 개선을 위해 '할 수 있다' 식의 예산지원에 관한 현 규정을 '해야 한다'는 식으로 의무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의제 발굴을 위한 경사노위의 전문인력 파견 및 지역 담당자 역량 제고 훈련 등 입체적인 지원을 병행할 필요성도 강조했다.

권기섭 위원장은 “중앙 사회적 대화와 지역 사회적 대화는 큰 틀에서 하나”라며, “전국 이슈가 지역을 통해 공론화되고 지역의 이슈가 중앙에 전달되는 연계강화를 통해 국민 모두가 공감하는 타협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권기섭 위원장) 지역의 이슈가 중앙에 전달되는 연계강화로 국민이 공감하는 타협을 이룰 수 있을 것

”

한편, 경사노위는 고용노동부와 함께 12월 '전국단위 지역 노사민정 상생협력 활성화 워크숍'을 개최하고 지역노사민정협의회의 역할 강화와 우수사례 공유, 지역별 의견 수렴 등 지역과의 연계 강화를 추진할 예정이다. **esc**

담당 대외협력실 이현욱 전문위원